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¹⁾

李 容 根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흔히 한국을 압축성장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이야기하고, 생물학에서는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고 한다. 이미 세계금융에 편입되어 있는 현재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진단 및 처방을 위해서는 세계 금융감독의 조류에 대한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현안을 보는 시각을 가다듬고, 나아가서 한국금융의 진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국 금융산업에서는 선진국이 20년 동안 이룩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났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2000년까지 무려 7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 및 진화 과정이 한국에서는 불과 2년만에 압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은행은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대마불사, 은행불패’의 과정에서 쌓여왔던 탐들이 무너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은행도 도산할 수 있다’라는 명제 하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규제와 보호를 통해 거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던 상황이 급속하게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쪽에서는 자동차회사를 공기업화 하라는 시위와 농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치금융과 건전성 감독간의 개념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치계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지만, 이것은 시대와 변화의 여건을 충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정립되어온 시장과 정부의 관계, 즉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글은 2000년 4월 26일 조선히텔에서 개최된 특별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임.

금융발전의 역사를 바꾸어 말하면 금융위기의 역사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글라스-스티걸 액트(Glass Stigall Act)라고 하는 은행법이 20세기 내내 골격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후에도 미국은 간헐적으로 금융위기에 시달려 왔는데, 한번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면 수백, 수천 개의 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마치 산불이 휩쓸고 간 것처럼 미국경제가 황폐해진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은행은 다점포주의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단일점포로 이루어진 은행이 많기 때문에,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면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 할지라도 바로 공신력이 취약해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이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던 기업은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융의 외부효과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을 일반산업과 구분하여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수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제조치도 필요한 것이다.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은 이른바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감독도 역시 그와 같은 역사의 순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흔히 은행이라고 하면 지급준비제도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나라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를 통화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급준비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인출사태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후에 나온 예금보호제도—우리 나라도 얼마 전에 채택되었지만—가 도입된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던 금융위기는 한동안 억제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저축대부조합(S&L) 사태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예금보험 그 자체는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부작용을 계속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부분보장의 원칙이 천명되고 자본충실도를 기조로 하는 건전성 감독이 지급준비제도나 예금보호제도에 이어 보완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투기적 행위를 일삼는 금융

회사를 시장에서 축출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의 사전적 대응을 촉구하여 부실의 증폭을 방지하고 특히 변별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치·사회적 고리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성 감독, 즉 건전성 규제는 자율과 혁신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이다. 모든 나라에서 오랫동안 금리 등 금융서비스의 가격과 금융권별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중에 부가가 축적되면서 자산증식을 위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제고되고, 금융의 증권화로 말미암아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 등 규제회피가 일반화됨에 따라 결국 금융은 자유화로 이행하는 추세를 밟게 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하여 경쟁이 격화되고 이익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경영관행을 답습함으로써 부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바로 1980년대와 1990년에 걸쳐 일어난 세계적인 금융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건전성 규제는 국내금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제금융에도 도입되어 있다. 금융거래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세계금융이 불안해지고, 일부 은행의 도산이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규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이 BIS 자기자본 규제제도가 주도하고 있는 자본충실도에 대한 규제가 완전무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BIS에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적정 자기자본 규제의 공식 적용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식이라 하겠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BIS는 공적인 국제금융기구가 아니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이 조직은 사실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특히 한국 외환위기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세계적 조직이 되었다.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이미 BIS의 자본비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이 이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70년대 미국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덴마크는 자본충실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 은행들을 엄격히 제재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후 1980년대에 있었던 북구의 신용위기에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덴마크의 사례로 고무된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자본건전성 규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적기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발동하게 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건전성 규제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감독의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를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거나 특정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 충실한 은행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위기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치 산정방법의 수정을 통해서 BIS 기준이 수시로 보완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규범화됨에 따라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민간기구인 BIS 규제가 다자간 협상보다도 오히려 구속력을 갖게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BIS의 자기자본 비율은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점검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은행감독 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CAMELS라고 하는 제도이다. 이 CAMELS 제도는 낙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혼성어이다. 즉, CAMELS의 'C'는 Capital adequacy라고 하여 자본의 적정성, 'A'는 Asset quality라고 하는 자산의 건전성, 'M'은 Management라고 해서 경영능력, 'E'은 Earnings 즉 수익성, 'L'은 Liquidity 유동성, 그 다음에 'S'는 Sensitivity to market risk로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이 여섯 글자를 딴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사전점검 하는 것을 경영실태조사라고 하고 이것이 감독당국의 중요한 검사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러한 점검을 통해서 은행이 앞으로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CAMELS 테스트의 결과가 우수한 은행은 BIS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 현재 BIS 비율이 기준 이상이라 할지라도 CAMELS의 결과가 나쁘면 언젠가 곧 비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감독당국은 사전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령 감독당국이 이와 같은 경영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전문회사가 세계 각국의 은행을 비교·평가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평가·보고한 수준이 국제기준에 미달한다거나 국제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은행의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그 은행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조화를 달성하고 있다. 은행이라 할지라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금을 유치할 수 없게 되어 건전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시장의 압력을 받게된다. 대출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이 위협해지므로 은행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그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업이 실상을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되고 위험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기피할 것이다. 반면에 피상적으로는 위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건실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면 이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상업성에 입각한 여신심사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배분하게되고 그 결과 자금배분이 효율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용배분 과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면 효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융산업 전체 또는 일부를 규제하거나 보호할 경우, 시장원리의 효율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에서 신용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장원리의 오묘한 조화는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체득해서 제대로 대응할 때에만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설마 하면서 안

이하계 지낸다면 적게는 개인과 그가 속한 조직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서양에는 nobless oblige 라는 말이 있다. 귀족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말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 또는 노조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노조간부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차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과단성있게 행동할 것을 본인은 부탁드리고 싶다. 전환의 시대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가 시사하는 바는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은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고, 시장원리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1997년에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통합감독기구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감독방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서너 가지로 요약된다. FSA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i) 금융감독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해서 현실 속의 목표를 추구하고, ii) 금융회사의 도산 등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고객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iii) 사후 대응적 행동보다는 사전 예방적 개입을 통한 금융감독을 하고, iv) 금융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감독의 부담을 축소한다는 것들이다. FSA가 발표한 감독방침 중 특이한 것은 금융기관을 ‘기관’이라 하지 않고 ‘회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financial institution’이나 ‘financial company’라고 하지 않고 그냥 ‘firm’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나 금융기관, 일반기업이 마찬가지로 취지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금융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정부의 한계를 솔직히 시인하고 시장참가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당부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이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도 은행은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판정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금융의 양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영국의 통합감독기구도 시장의 힘 앞에

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고,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원리에 적응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랫동안 정부의 보호와 지시에 길들여져 있고 정부에 하소연한다거나 막무가내로 버티기만 하면 길이 열리겠지 하는 과거의 행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책임에 의한 시장경쟁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국제 무한경쟁의 여건에 적응하여 한국 기업과 금융회사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은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앞장서서 수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본인이 듣기로는 근래 재벌기업들이 외환 위기 이후 2년 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으므로 이제는 완화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저(Caesar)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저가 좌지우지하던 것을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의 각 회사마다 주주가 다르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책임을 맡은 대표이사가 다른데, 회사이름의 처음 몇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인사나 자금운영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주식회사도 자본주의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동이 바로 나라가 위기에 이르는 병의 일단이 되었고,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명칭이야 비서실이던 기조실이던 구조조정본부이던 관계없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기능은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흔히들 디지털경제라고 한다. 나이가 많은 층들을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라 하고 나이가 적은 층들을 디지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닷컴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디지털경제의 빠른 세태를 의미하기보다는 0아니면 1이라는 신경제가 본격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구미 각국에서 인터넷 은행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며칠 전 HSBC와 메릴린치가 합작하여 on-line 금

용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은행업무와 증권중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시티은행은 벌써부터 아시아지역의 인터넷 금융을 석권할 목적으로 매년 약 2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했다. 일본에서도 세계은행이 합병한 은행이 인터넷 금융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금융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역시 마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반면 초기투자가 크므로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본인은 시장경제의 힘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요즘 취미생활로 흔히 등산을 한다. 그래서 등산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등산이라 하지 않고 입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 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입산은 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자연인 산의 품에 안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당국도 등산하는 것처럼 시장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장참가자로서 입산하는 것처럼 활동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금융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장금융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의 한 요소로서 건전성 감독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담스님은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가는 길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시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한국경제, 한국금융의 전망이 밝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지냈던 때가 더 좋았다고 모세에게 불평하던 사태가 21세기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다.

질의·응답

<질문> 미국의 금융감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제도의 변천에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제도는 규정적 회계준칙에서 일반적 회계준칙으로 이행했고, 금융회계에 대해서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하나의 도구인 회계제도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두 번째 질문은 건전성 분류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CAMELS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예방적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추정손실이나 회수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관계기관에 있을 때 4단계로 분류되었던 부실여신은 현재 몇 단계로 분류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은행, 보험, 증권을 통합한 통합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 세 분야의 조화 있는 감독과 검사를 위한 향후 구상,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과 검사의 사전적, 사후적 협조와 또 세 분야에 대한 연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이 분야 전체에 대한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행정부와 대기업 경제단체들간의 알력과 갈등 심화가 표출되어가고 있음은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까지도 우리 나라 재벌개혁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국민경제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이 먼저 솔선 수범하여 부당·부정 축재한 재산부분을 국가에 환원시

켜서 외채상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수출상품 제조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강구하여 실천해 나갈 때 소위 대기업들도 정치권을 따르지 않고는 배겨나질 못할 것이다. 즉, 부당·부정 축재자의 해당 재산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정경개혁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환원을 언제, 어떠한 방식을 할 것인지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다. 회계제도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합성 여부가 판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회계제도를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계제도가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회계제도가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회계제도는 제정기관의 독립성도 필요하고 중립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부는 한국회계연구원을 이미 작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이 연구원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회계제도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 기업별 회계에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회계의 규정과 금융, 또 금융 중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의 회계기준이 각각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물론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 기준 자체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상실하면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회계제도가 지금 개정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몇 단계로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실무적인 문제로,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변경된 기준을 보내드리겠다.

통합감독기관으로서의 효율적인 감독과 검사 방법, 또 연계검사 및 사전·사후적 금융권별 협조문제를 말씀드리겠다. 통합감독기구가 설립됨으로써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제2금융권간의 자금흐름과 검사방법의 일관성이 더욱 잘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증권, 보험이 각자 특별한 기준에 따라 감독받았기 때문에 감독의 획일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되어 서로 곁에서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조직은 크게 기획, 관리, 감독 그리고 검사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이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을 담당하는 부원장급에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참모격인 부원장보는 매트릭스 형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별로 각각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재벌간의 문제를 최근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충고는 해당사항이 있다면 참고하도록 노력하겠다.

필자 약력

李 容 根

고려대 경제학과 (1965)	관세중앙분석소장 (1990)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69)	재무부 기획관리관, 국세심판소 상임위원 (1992~95)
네덜란드 사회과학원 수 (1974)	ADB 이사 (1995~98)
한양대 행정학 박사 (1994)	금감위 상임위원/부위원장 (1998-99)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근무 (1969~88)	금융감독위원장 (2000~2001)
주미재무관 (1988)	